

전북 선거 조직화 '총력전'

민주 선대위 자치분권위

도 본부장단 필승 결의대회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자치분권위원회는 신정훈 위원장(전남 나주·화순 국회의원)과 윤준병 부위원장(전북 정읍·고창 국회의원)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6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북도당 결의대회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자치분권위원회가 수도권 결의대회 이후, 지방을 순회하는 첫 일정이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전북도 결의대회에서 '전북도의 자치분권 핵심 리더를 지역 본부장으로 임명하고 활동을 독려해, 전북도의 조직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각 지역 본부장으로선 전주시 유창희, 군산시 박정희, 정읍시 송암조, 남원시 장선화, 김제시 김길정, 완주군 박영철, 진안군 이인규, 장수군 이종섭, 순창군 양주철, 부안군 최정열 본부장이 임명됐다.

자치분권위원회는 도 지역 본부장 임명 후, '전북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지역의 리더들과 전북의 발전과 지방자치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리더들과 자치분권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취합해 새로운 지역별 맞춤 공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임명된 도 지역 본부장들은 도내 각 지역을 순회하며, 이재명 후보의 자치분권 공약에 대해서 살펴보고, 전북도 곳곳의 민심을 듣고 확인하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신정훈 자치분권위원장은 본부장 결의대회에 이어, 전북도 지역 지방의원과 마을활동가들을 순차적으로 만나 전북도 지역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자치분권위원회는 신정훈 위원장(전남 나주·화순 국회의원)과 윤준병 부위원장(전북 정읍·고창 국회의원)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6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신영대 의원, 민주 선대위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에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직접 이끄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이재명·이낙연 공동위원장, 이하 비전위)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비전위는 국가비전과 국민통합을 주제로 ▲민주 ▲혁신 ▲포용 ▲평화 ▲미래 등 각 분야에서 주요 의제를 추려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를 설계한다.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지난해 12월 27일 출범했다.



신 의원은 그간 당 원내부대표, 대변인을 역임하며, 각종 이슈 대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또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업무위원으로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정책은 물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극복 등을 위한 정책 마련에 주력했다.

신 의원은 전문성을 인정받은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집중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정책 발굴에 역량을 쏟았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국가 미래 비전 실현과 국민통합을 위해 단결의 정신으로 함께하겠다"며 "민주당의 대선 승리와 4기 민주정부 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타임오프제 법안처리 협조하라"

국회 한도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 "전체회의 개최 합의" 촉구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원주·진안·무주·장수)이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도입을 위한 법안 처리에 미온적인 야당의 태도에 날을 세웠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 8인은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측에 타임오프제 법안 처리를 위한 환노위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는 지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위원장 안호영)에서 다섯 차례에 걸친 심사 끝에 여야 합의로

통과돼 물살을 타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법안소위 이후 상임위 전체회의 일정을 확정하지 않고 있어 오는 13일 종료되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동안 일반 국민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노조법'과 달리 '공무원·교원 노조법'은 타임오프제를 보장하고 있지 않아 헌법적 가치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수 차례 타임오프 법안 처리 의지를 밝혔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또한 지난해 12월 한국노총을 방문해 찬성

의사를 표한 바 있다.

안호영 의원은 "타임오프제 도입은 공무원·교원 역시 같은 노동자임에도 법에 의한 차별을 받는 현실을 대전환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윤석열 후보의 타임오프제 도입 찬성 의사는 물론, 노동공약 자체가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노동 대전환이 필요한 지금 국민의 시간 노동자의 시간이 맞추어 '공무원·교원 노조법'을 조속히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책임있는 자세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산림 내 방치 산물들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이원택 의원, 탄소중립 사회 건인 '목재이용법' 개정안 대표발의

탄소중립사회를 건인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산업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6일 산림 내 방치되던 산물 등을 수집해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재이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체계적 이용 활성화 및 증명 절차의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해당 내용을 법률로 규정해 관련 제도의 정착성과 집행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산림바이오매스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용어를 정의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책 수립 등 국가·지자체의 역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신청 및 허가 등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산림바이오매스의 안정적 공급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산림바이오매스센터의 역할 및 지정근거 신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유통 과정에서 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유행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의 내용을 분명히 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이력 관리 및 유통 질서를 확립하도록 했다. /유호상 기자

중증운동장애 영유아 운동재활 기반 확대 방안 모색

조지훈 전 경진원장

쿠미운동발달센터 방문

전주시장 출마예정자인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 중증운동장애 영유아의 운동재활 기반을 확대하고자 방안 모색에 나섰다.

조지훈 전 경진원장은 6일 중증운동장애 영유아의 운동 재활을 돕는 사회적기업인 '쿠미운동발달센터(대표 문병무)'를 방문해 중증운동장애 영유아들의 재활 현황과 지자체 역할의 필요성 등에 대한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4월부터 기획·시작한 '청년에게 배우다' 프로젝트 일환에 따른 것으로 열세 번째다.

특히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도시야말로 비장애인을 포함한 시민 모두가 누리는 '전주다'라는 조 전 원장의 소신이 적극 반영된 행보다.

이날 문병무 대표는 "재활을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기에 중증운동장애 영유아 가정의 부담이 크고 시설 역시 전국적으로도 부족하다"면서 "재활뿐 아니라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와 함께,



전주시장 출마예정자인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 6일 '쿠미운동발달센터'를 방문해 중증운동장애 영유아 재활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있다.

보조기구를 부담 없이 빌려서 쓸 수 있는 보조기기 도서관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조지훈 전 경진원장은 "중증운동장애 아이들이 마음 놓고 제대로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 확대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며 "제도 안에서 함께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회발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와 함께,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고민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쿠미운동발달센터의 성장을 응원하며, 장애인의 복지·건강 향상을 위한 지원 정책 개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지훈 전 경진원장은 앞으로 '청년에게 배우다'를 통해 전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인 청년과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우범기 전 정무부지사(사인 오른쪽)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직속 균형발전 위원회(위원장 김두관 의원) 산하 공동선대 위원장과 전북총괄본부장으로 임명됐다. 균형발전위원회(후보직속)는 공동위원장의 김두관 의원과 송영길 당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균형발전이 곧 생존전략"

우범기 전 정무부지사

이재명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

전주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우범기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직속 균형발전 위원회(위원장 김두관 의원) 산하 공동선대 위원장과 전북총괄본부장으로 임명됐다.

균형발전위원회(후보직속)는 공동위원장인 김두관 의원과 송영길 당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서 이재명 후보는 오영훈 비서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균형발전이 곧 생존전략'임을 강조하

며, 균형발전에 대한 큰 관심과 지원 의사를 나타냈다.

우 전 부지사는 "위원회의 '국민이 어디에 살든 고무 행복하게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지에 맞게 균형발전 위원회의 5대 핵심정책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하며 "전주시가 경제에 뒤처진 낙후도시라는 오명을 벗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우범기 전 부지사는 기획예산처 근무시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는데 큰 기여를 했으며, 광주광역시부시장 재임시 '광주형 일자리'를 대담하게 했다. 또, 전북 부지사로 재직할 때는 '군산형 일자리 지정'을 이끌어내 주목을 받은 바 있고, 새만금 공항 예산 증액 등 전북이 2년 연속 국가예산 8조원 시대를 여는 데에도 기여했다. /김윤상 기자

이중선 전 행정관, 이재명

선대위 청년위 상임부위원장에

전주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대위의 청년위원회 상임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이 전 행정관은 "전주시 청년들을 위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물론, 전주지역 청년들을 위해 직접 소통 채널을 통한 정책과 공약을 만들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주 지역의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과 사업을 개발해 국가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후 청년들과의 적극적인 토론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지속적인 유출로 미래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전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양성빈 전 도의원, 민주

정책위 부의장 임명

장수군수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양성빈 전 전북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이하 더민 정책위) 부의장으로 임명됐다.

양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임명돼 활동하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양 전 의원의 이번 정책위원회 부의장 임명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최초 제안 등 지역소멸에 공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다양한 노력의 결과물로 꼽힌다.

앞서 양 전 의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당 대표가 임명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중핵인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선 대선과 지방선거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당의 중·장기사업을 기획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양성빈 전 의원은 '일·이·삼 비전'을 앞세워 양질의 '일자리 창출', 농민과 지역업자 등의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통한 인구의 행복한 고향 장수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가소득의 안정을 위한 경영지원, 모두를 위한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참여와 주민주도 확대, 교육과 문화·예술·체육의 선진지 등 다섯 가지 주요정책을 설계하고 실천하기 위해 한눈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